

방통위 독일 · 벨기에 공무국외출장 결과

- ◆ 기 간 : 2018. 9. 9. (일) ~ 9. 15. (토), 5박 7일
- ◆ 방문국가 : 독일 · 벨기에

2018. 10.



방 송 통 신 위 원 회

I . 출장 개요

II . 세부 활동

1. 데틀레프 퀸 (전) 작센주 방통위 의장 면담	4
2. 연방경제부(BMWi) 동독재건 특임부처 방문	11
3. 독일 방송기록보관소(DRA) 방문	18
4. 독일 공영방송(RBB) 방문	23
5. EU 지역개발국 방문	30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o 독일·EU와의 방송통신 협력강화, 독일 방송기록보관소 운영현황 및 독일 통일기금·EU 구조기금 활용 내역 조사

2. 출장 국가 : 독일(베를린), 벨기에(브뤼셀)

3. 출장 기간 : '18. 9. 9.(월) - 9. 15.(토), 5박 7일

4. 출장자

구분	부서	직위(직급)	성명
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표 철 수
2	기획조정실	국제협력팀장	김 영 주
3	기획조정실	국제협력팀 사무관	이 성 용
4	운영지원과	기록연구사	안 상 민
5	기획조정실	국제협력팀 주무관	박 민 규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홍지영 연구원, 김지은 통역사(한-영) 수행

5. 주요 활동

- o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금 활용방안) 독일 통일 전후, 동·서독 주민간의 민족 동질성 회복 및 인프라 변화, 방송편성 변화 등을 위한 독일 통일기금 및 EU기금 활용 내역 조사
- o (정부 간 협력) 독일·EU 등 방송통신 규제기관과의 정책 공유 및 협력 강화를 통한 방송통신 민·관 교류 활성화에 기여

6. 선물수령 관련

- o 선물 신고 여부 : X (수령한 선물 없음)

II. 세부 활동

1. 데틀레프 퀸 (전) 작센주 방통위 의장 면담

- 일시 /장소 : '18.9.10.(월) 10:30~11:45 / 독일 베를린 한국문화원
- 면담자 : 데틀레프 퀸 (전) 작센주 방통위 의장

□ 세부 면담내용

- o (방통위) 만나뵙게되어 기쁘고 귀한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o (데틀레프 퀸)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o (방통위) 의회와 정부, 방송사 경영, 미디어 집행기관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신 것에 대해 존경을 표함. 현재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은 독일의 통일을 무척 부러워함. 이번 방문을 계기로 독일 통일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 갈수 있기를 기대함.
- o (방통위) 통일 이전 동독과의 방송 교류협력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 o (데틀레프 퀸) 원칙적으로 통일 이전에 방송교류는 없었음. 1972년 동·서독 간 기본조약 체결이후 예외적·간헐적인 교류는 있었음. 전(全)독일연구소 소장이었을 때, 영상물기록소 아카이브에서 동독에서 제작된 영화, 이미지, TV프로그램 등에 대한 저작권을 구입하여 통일이전에도 공식적으로 서독에서 보유했었음.
- o (방통위) 통일이후 통일 기금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기금 중에서 방송분야 기금의 규모, 그리고 어떤곳에 사용되었는지?

- o (데틀레프 퀸) 독일은 과거 2차세계대전 시기의 나치정권에 의한 방송장악에 대한 폐해를 빼저리게 경험한적이 있음. 그래서 서독에서는 1949년 헌법에 연방정부가 방송통신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방송통신은 각 연방주정부에서 관할함. 그래서 서독 연방정부에서는 동독과 방송 관련 협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그래서 ARD 등 공영방송의 주체들이 특파원 파견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동독 방송사와 교류협력을 논의함. 다만, 파견되는 특파원들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때에는 서독 연방정부와 동독 간에 협의를 할 수 있었음.
- 기금과 관련해서는, 통일 이후에 연방정부가 기금을 활용하여 동독에 투자하지는 않았음. 할 필요가 없었음. 왜냐하면 신연방 주정부들은 방송부문에 투자할 충분한 방송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었고 그것을 재원으로 투자하였음.
- o (방통위) 통일 이후에 동독을 부흥시키기 위한 통일 기금을 조성한 사항은 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 o (데틀레프 퀸) 연방차원의 기금의 이전이나 지급을 통해서 방송 분야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서독이 각 지방 정부에 방송관련 권한을 이양한 반면, 동독은 중앙집권적으로 동 베를린에 방송분야의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던 상태라서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함.
- 이러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고 연방주마다 법을 어떻게 제정하는지, 행정적인 변화, 동베를린에 집중되어 있던 방송인력 및 시스템을 어떻게 해체하고 분산할 것인지? 구 서독 지역과의 방송시스템과 어떻게 호환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함.
- o (방통위) 말씀하신 분산화 과정에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서 충당하였는지? 공동기금에서 지원이 있었는지?
- o (데틀레프 퀸) 연방차원의 재원 지원이 필요없을 만큼 각 자치주의 재원이 충분했음. 통일 후 동독 방송국들이 받는 재원이 방송수신료로 인해 급격히 증가함. 1990년 7월 화폐통합 후 통일이 되었는데, 동독인들이 서독 마르크를 지급받았는데 그것으로 수신료를 지불함. 그 수신료의 규모가 커서 동독의 방송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규모의 재원이었음.
- o (방통위) 동·서독 주민들간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았을텐데, 주민들 간의 동질성회복이나 융합을 위해 방송의 역할은? 방송정책은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는지?
- o (데틀레프 퀸) 동·서독 분단시기에도 정체성 회복은 큰 이슈였음. 상호간 이질적으로 되지 않게 하는데 방송이 큰 역할을 함. 본인은 유년기를 서 베를린에서 보냈고, 성장하면서 부모님과 동 베를린 본(bonn)으로 이주함. 서 베를린에서 생활할때 동독 TV를 시청함. 주로 1920-30년대 영화 등을 시청함. 마찬가지로 동독에서는 서독의 라디오, TV 등을 청취·시청할 수 있었음. 단, 작센주의 드레스덴은 지형상 서독의 방송을 수신할 수 없었음.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즐겨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서독 분단기에도 민족간의 동질성 유지에 방송이 큰 역할을 함.
- 1972년 동·서독간 기본조약 체결 이후, 서독 방송사들이 허가를 받고 동독 지역에 특파원을 파견함. 물론 동독에서도 서독에 파견 하였음. 서독으로 파견된 특파원들은 서독 방송을 위해 동독의 생활상을 취재하고 서독지역에 방송하였고, 이것을 다시 동독 사람들이 시청함.
- o (방통위) 현재 한국에서는 남과 북이 상대 방송을 주민들이 시청하지 못함. 독일은 통일 후에 동서독 방송사간 주파수 조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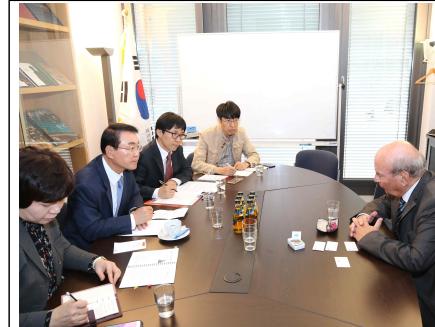
- o (데틀레프 퀸) 라디오 관련으로는 동·서독 분리 이전부터 존재했던 시스템으로 큰 문제는 없었음. 특히 FM방송은 서로 원하기만 하면 전파간섭을 할 수 있었지만, 서로 그렇게 하지 않았음.
- TV방송은 주파수 방해를 통한 과급력이 크기 때문에 문제였음. 주파수간섭이 문제라기보다는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의 방송을 더 잘 수신할 수 있도록 동독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안테나를 설치하였음(60-70년), 하지만 70년대 초까지는 이러한 안테나 설치가 발각되면 강제철거를 당하였음. 그러나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는 이러한 단속이 완화됨.
- o (방통위) 방송기술적인 측면에서 동·서독간 방송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 o (데틀레프 퀸) 동·서독간 방송 기술 격차뿐만 아니라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컸음. 본인이 동독지역 작센주 라디오 사장으로 재직시(1990년~91년), 보유한 설비가 서독의 방송설비에 비해 낙후되었고 기술자들도 새로운 설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었음.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방송설비 신설 및 장비 교체 등은 방금 전 말씀드린 방송수신료로 모두 충당하였음. 전화망 또한 매우 낙후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인프라도 방송수신료를 재원으로 신규장비로 교체하였음.
- o (방통위) 퀸 위원장께서 계셨던 작센주와 드레스덴지역의 방송사의 수준과 수신료 징수금액의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통일 후 방송 인력은 동독인들로만 활용하였는지? 아니면 서독 방송기술자도 활용하였는지?
- o (데틀레프 퀸) 각 연방주의 방송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수신료가 걷히기 때문에 차이는 존재함. 특히, 브르멘 주의 경우는 인구가

- 적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재원이 부족했고 통일 이후에도 그런 측면이 있었음. 그리고 본인 있었던 방송사에서는 전체 방송인력 중 본인이 유일한 서독 출신이었음. 통일 후 동독의 방송사에서 서독출신을 초빙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본인이 동독지역 방송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음. 서독출신 방송인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독에서 근무하기를 선호하지 않았음. 작센 라디오 회사에서는 전체직원 중에서 3~4명 정도가 서독 출신이었음.
- o (방통위) 동독 방송기술수준이 서독에 비해 많이 뒤쳐졌을텐데, 동독 방송인들이 서독의 방송기술을 어떻게 습득하였는지? 따로 교육을 받았는지?
 - o (데틀레프 퀸) 동독출신 직원들에게 별도의 기술교육이 필요 없었음. 동독 기술자들은 과거부터 부족한 물자에 대해 익숙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창조적이고 융통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므로,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도 빠르게 사용법들을 익히고 사용하였음.
 - o (방통위) 수신료징수는 가구당 인지? TV 수상기당 인지?
 - o (데틀레프 퀸) 독일 전역의 연방주와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함. 동일한 액수로 가구당 징수함. 수신료 적정성 여부는 2~3년 주기로 논의하여 결정함. 정부기관에서 논의 하는 것이 아닌 지역 방송연합체(ARD, 공영방송)에서 수신료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함. 수신료의 징수는 징수대행 업체(GEZ)가 수행함.
 - o (방통위) 한국은 아직 분단국가로서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임. 남북간 방송 교류를 위해 조언해 주실 점은?
 - o (데틀레프 퀸) 독일의 분단기에 방송이 동·서독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 어떤점을 위해 노력했는지 잘 분석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음. 동·서독 주민간 방송의 상호 시청이 가능했던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함. 한국도 이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당시 동독인들은 서독에 대한 체제 우월감이 있었음. 동독인들은 본인들의 방송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었음. 이러한 점 때문에 동독에서 서독의 방송수신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었음. 이 경우처럼 먼저 남측부터 북한의 방송에 대해 열어줄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먼저 개방하여 추진하면 심리적으로 북측도 거부할 수 없을 것임. 전(全)독일 연구소에서도 교류를 위해 서독사람들에게 동독여행을 많이 하도록 홍보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하였음.

- (방통위) 수신료 징수 후 전화통신망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었는지?
- (데틀레프 퀸) 통신망 설비의 현대화 명목으로 가능하였음. 설비 개선을 일반 국가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 진행하여 은행을 통해 어느 정도 재원을 충당하였음.
- (방통위) 인구수 비례해서 수신료를 징수하면 지역별로 수신료 징수 액이 차등이 있었을 텐데 징수액이 부족한 곳은 징수액이 많은 곳에서 보조를 해주는지?
- (데틀레프 퀸) 징수액에 대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없었음. 징수액이 덜 걷히는 곳에서도 설비개선을 위한 비용이 충분하였음. 심지어 설비개선을 시작한지 3년 후에는 서독지역보다 동독지역의 설비가 더 좋아졌음.
- (방통위) 시간 내주셔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림. 큰 도움이 되었음.

<불임 - 면담 및 방문 사진자료>



< 면담 장면 >



< 면담 장면 >



< 선물 증정 >



< 기념 사진 >

2. 연방경제부(BMWi) 동독재건 특임부처 방문

□ 일 시 : '18.9.10.(월) 14:30~16:00

□ 장 소 : 연방경제부(BMWi) 동독재건 특임부처 사무실

□ 면담자 : 고트프리드 콘첸도르프 박사(Dr. Gottfried Konzendorf)

□ 세부 면담내용

- (방통위) 고트프리드 콘첸도르프 박사님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고 바쁘신 중에도 귀한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림
- (BMWi) 같이 자리를 하게되어 반갑습니다. 본인이 신 연방주 특임관에 보직 받은지 5년 정도 되었음. 특별히 기술혁신, 민주주의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민주주의 관련하여 구 동독지역에서 극우 단체가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통일 과정의 한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함.
- (방통위)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임. 통일된 독일을 부러워 하고 있음. 이번 방문을 계기로 독일의 경험을 많이 알고 싶음.
- (BMWi) 본인은 통일 전반에 대한 전문가라 그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본인이 3주전에 한국을 방문하여 비무장지대에 다녀왔음. 그리고 하나원을 방문하여 탈북자들도 만날 수 있었음
- (방통위) 한국을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림
- (BMWi) 독일의 통일 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몇가지 당부사항이 있음. 하나는 통일 자체가 동독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평화 혁명의 결과임. 다른 하나는 그 전에 아무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1970년대부터 동·서독간 교류가 계속 있었고 그런 분위기가 이어져 통일이 가능했었음. 마지막으로 최근 한반도의 정세가 1970년대 독일과 비슷하게 앞으로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국면으로 이어지기를 바람. 독일 통일 당시에도 평가리 폴란드 등 동구권에서 민주화 물결이 있었고, 국제적인 정세도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관 및 미국, 영국 등의 지원이 있어서 통일이 가능했었음.

- (방통위) 남·북간 사정이 동·서독과는 다른 부분은 북한의 핵문제가 있음. 앞으로 우리도 평화체제로 가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동·서독이 통합이 되면서 통일과 관련된 국가적인 비용이 발생했을 텐데 통일기금을 비롯한 이런 비용 등을 어떻게 조성하였고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 (BMWi) 당시 동독지역 1989년-90년의 경제적인 상황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재건이 이루어 졌는지 말씀드리겠음. 기본적으로 당시 큰 경제적인 변화는 국영기업체들이 민영화해야 하는데, 통일이전부터 만들어진 신탁청에서 그 역할을 담당했음. 신탁청의 민영화 사업이 급격한 변화였음. 90-95년 사이에 14,000개 사업체가 민영화 됨. 사업체가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생산성임. 당시 동독의 일반적인 기업의 생산성이 서독의 사업체와 비교했을 때 20-25%수준이었음. 이런 내용도 그 이전에 서독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했음. 동독지역의 통계자료는 오류가 많았고 실제로 파악했을때는 더 좋지 않았음. 기업들의 채무관계를 살펴보면 매우 불량했었고 상환가능성도 매우 낮았음. 산업 전반의 설비가 낙후되었었음. 어떤 설비들은 제국주의시대 때 만들어진 것들도 있었음. 특히 통신설비가 낙후되었음. 그런 낙후된 설비들을 가지고 생산을 했을 때 환경파괴가 심했음. 한 사례로 화학공장 주변의 흙들을 폴다 버려야 하는 정도로 심각했고 이러한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도 추가로

필요했었음. 경제적인 부분들은 화폐통합 등 정치적인 부분들과 함께 생각해야함. 화폐통합 이전에는 동독지역의 저임금이 매력이었는데 화폐통합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고 생산단가가 높아졌음. 동독지역의 생산품 가격은 높아졌으나 질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소련 등의 기존시장이 사라지게 됨. 통일 직후 구동독지역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서독지역에서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발전의 과실(자유선거, 시민의 권리 증진 등)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회사의 폐업 및 실업 등 탈 산업화로 동독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 동독의 대량실업으로 사회보험 등에 많이 의지하게 되었음. 그래서 동독 전반에 대한 연방정부의 구제 프로그램이 필요했음. 이를 동독재건계획이라고 부름. 이 계획의 목적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삶의 질을 서독 수준으로 빠른 시일내에 맞추는 것임. 재정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교통망, 교육시설, 노인요양, 보건, 보험, 통신망 등 인프라의 재건 및 확충을 위해 노력했음. 1989년부터 몇 년 사이에 신규 전화망이 설치되었음. 데이터 통신망 등도 100배가량 양이 늘어남. 케이블 통신의 경우는 기존의 동독에는 전혀 없었음. 그래서 2-3년 만에 420만개 회선이 설치되었음. 통신망 관련으로 투자된 비용이 600억 독일 마르크, 약 300억 유로가 사용되었음. 이 작업을 위해 도이치 텔레콤에 신규로 5만명 정도 투입되었음.

- o (방통위) 도이치텔레콤은 소유가 어디인가?
- o (BMWi) 처음에는 체신부였음. 우편사업 및 통신 기간사업을 담당하다가 90년대 초부터 여러번의 개혁을 거쳐 부분 민영화하였음. 그 중 통신부문은 도이치텔레콤으로 국영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동독재건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가령, 기업에 대출제공을 쉽게 해주거나, 기존 사업체가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경우 기업에 보조를 해주고 대학과 산학협력을 하는 기업에

추가 지원. 구직을 하는 구 동독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을 실시함. 기업가에게는 임금을 보조해 줌. 동·서독간 GDP가 동일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음. 처음 동독주민의 GDP는 서독의 40% 못되게 시작했지만 초기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상승하고 최근에는 완만하게 수렴중임. 소득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짐. 통신부문에는 2만 3천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겼으며, 관련 업계는 5만여개의 일자리가 생김. 2000년대 살짝 올라가다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까지 철도, 도로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라 GDP가 약간 내려갔음. 상승이 급격히 이뤄지다가 1997년부터 완만해졌음. 중요한 원인중 하나가 동독에는 중소기업이 많았고 대기업의 본사는 대부분 서독지역이었음. 그래서 매출액이 산정될 때 동독지역은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되게 되었음. 또하나 구조적인 측면이 있음.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투자가 일정부분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 비율이 동·서독간 차이가 있음. 서독지역에서 기술투자 비용의 2/3는 민간투자이고, 1/3은 국가였음. 반면에 동독 지역은 2/3는 국가이고, 1/3은 민간이었음. 그 이유는 대기업이 서독지역에 분포했었기 때문임. 수출도 동독지역에서 저조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마찬가지 임. 독일 연방정부에서의 구조적인 개선 사업은 현재도 진행중 임. 구 동독지역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부분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구 동독지역에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 발생시키게 함. 이를 위해 매년 수십억 유로의 규모로 지원하고 있음. 관련 재원은 1990년 초부터 3가지 방식으로 마련됨.

1990-1995년은 통일기금 : 1,150억 유로

1995-2004년은 제1차 연대협약 : 2,060억 유로

2004-2019년은 제2차 연대협약 : 1,560억 유로로 구성

1995년부터 16개 연방주에 분배하는 것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따라

분배함. 기금 마련 방안은 부가세가 16%에서 19%로 상승됨. 또한 사회보험 부담금도 사측과 노동자 모두 조금씩 상승함. 또한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함. 95년까지는 동독재건에 전적으로 사용. 95년 이후는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따라 16개주에 분배함.

- (방통위) 90-95에 통일기금은 모두 서독에서만 조성된 것인가? 아니면 일부가 동독 재원이 일부 포함된 것인가?
- (BMWi) 통일기금(~95년까지)을 포함한 모든 기금은 동·서독 주민이 동일하게 부담함.
- (방통위) 동독재건 프로그램에 따라 교통, 통신 등 인프라에 투자되었고 산업조정 및 고용, 신기술 지원 등에 투자되었는데 방송 인프라 분야에 투자된 부분은?
- (BMWi) 기본적인 원칙은 방송관련 사항은 연방정부의 권한이라 방송 인프라 관련 자료가 없다. 조금 더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 (방통위) 90-95년도 통일기금 1,150억 유로는 전체 독일 국가재정의 몇 %인가? 그리고 95-19년까지 연대협약 금액은 국가재정의 몇 %인가?
- (BMWi)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움. 지출하는 세목이 확정되지 않았고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알수가 없음. 또한 말씀드린 금액은 연방에서 들어간 부분만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는 지방재정조정제도 등 다른 시스템을 통해 동독지역에 투자된 것이 있어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움.
- (방통위) 많은 돈을 동독에 투자하게 되었을 때 서독 주민들의 반발은 없었는지? 혹시 다른 난관은 없었는지?

○ (BMWi) 물론 국민들 중에서 불만들이 있긴 하였음. 현재도 마찬가지임.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정치인들을 통해 표출된다고 했을 때 통일 이후 90년부터 어느 정당에서도 동독재건을 위한 비용 지출에 대해 반대하는 곳은 없었음. 또한 몇 년마다 새롭게 시스템이 바뀌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잘 통과 되었다는 것이 시민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함. 정치, 경제, 세계정세 등 한국의 상황과 독일은 1:1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하지만 예를 들어 조금 파손된 도로나 많이 파손된 도로나 새로 도로를 깔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임. 그러므로 큰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의 변화가 필요한 것임. 독일 통일과 관련하여 마스터 플랜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음. 실제로는 따로 마스터 플랜이 없었고,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것을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많았음. 그런 와중에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지라고 예상했지만 항상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역동적으로 대응해야 했음.

- (방통위) 90년 통일부터 30년간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정권의 변화에 따른 동독재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나 기관, 기구가 있었는지?
- (BMWi) 별도 기구는 없음. 하지만 독일은 정권이 교체되어도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통일관련 프로그램들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었음.
- (방통위)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림. 독일의 좋은 경험들을 우리도 활용하겠음. 향후 다시 뵙기를 희망함.
- (BMWi) 방문해 주신 것과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림.

<붙임 - 면담 및 방문 사진자료>



< 면담 장면 >



< 면담 장면 >



< 기념 사진 >



< 기념 사진 >

3. 독일 방송기록보관소 방문

□ 일 시 : '18.9.11.(화) 10:00~11:45

□ 장 소 : 방송기록보관소 회의실

□ 면담자 : 안나 피첸마이어 보관부 부장

□ 세부 면담내용

【 DRA의 연혁과 현황 】

- o 먼저, 저희 독일 방송기록보관소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o (방통위)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RA의 연혁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o DRA의 컨셉은 계속 생산되는 자료를 모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특정기간의 자료를 보관하는 컨셉으로 구축되어 있음. DRA는 1952년 DFF(Detsches Fernsehfunk) TV에서 LDR (Lautarchiv des deutschen Rundfunks)라는 편집아카이브, 음악아카이브, 필름아카이브를 설치하였으며, 1963년도에 현재의 DRA(Deutsches Rundfunkarchiv)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o DRA는 프랑크푸르트와 포츠담에 각각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은 100여명이 근무함. 프랑크푸르트에는 재단이사장 및 행정운영인력이 근무하며, 여기 포츠담에는 자료정리 및 기술인력이 근무하고 있음.
- o DRA는 역사적인 방송기록물을 보존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아날로그 TV영상들을 2020년까지 디지털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방송관계자의 원활한 검색을 위한 메타서치 고도화 및 DB고도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 o 아울러 DRA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방송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방송기록의 이용을 활성화 위해 방송기술연구, 디지털화, 전시, 연구프로젝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o DRA보관 방송기록물의 이용자그룹은 크게 3가지 유형임.
 - ARD네트워크 방송국들의 방송제작 목적을 위한 자료이용, 전시를 위한 방송자료 이용 및 연구목적 이용, 그리고 구 동독거주 일반인이 이용하고 있음.
 - 자료의 이용요금은 ARD네트워크에 속한 방송국들이 자료를 이용할 때는 무료임. 그리고 학문적 목적 또는 개인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소요 비용만을 받고 있으며, 상업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포함한 이용료를 받고 있음.
 - 특히 구동독의 생활상 및 역사연구에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연구자 및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
 - o 독일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익명의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의 창작된 후 70년 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1945년 이전 제2제국, 바이마르공화국, 나치독일의 제3제국 시대에 생산된 방송기록의 저작자가 불분명하여 저작권료 지불에 어려움이 있음.
 - o (방통위) DRA는 연간운영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프로젝트사업은 어떤 과정으로 결정을 내리는지?
 - o (안네피첸마이어)DRA는 ARD의 하위기관으로 ARD의 정책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 ARD의 예산재원은 수신료에서 나옴(가구당 월 17.8유로), DRA의 연간 예산은 1,200만유로이며, 예산편성 및 집행은 ARD에서 승인, 주요예산사업은 ARD사장단회의에서 승인을 받음.
 - o (방통위) 비영리법인으로서 외부재원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사업은 DRA 전체예산 대비 얼마나 차지하는가?
 - o (안네피첸마이어)전체예산 대비 1~2%에 지나지 않으나, 그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독일통일과 방송자료의 수집】**
- o 당시 구 동독체제에 있었던 30여개 방송국과, 만3천명의 방송국 직원들이 협정에 따라 폐쇄·해고되고, 이에 따라 어떤 주체가 구 동독 방송기록물(12만개의 방송결과물, 3만 시간의 라디오 방송, 3만6천개의 사운드클립과 정리안된 방송편집영상)들을 이관 받아 보관할 것인가 대한 문제가 있었음.
 - o 또한 구동독의 정치이데올로기 같은 프로그램(Schwarzer Kanal (흑색채널):1960년부터 방영된 동독 텔레비전의 대표적인 대(對) 서독 비방 프로그램)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음.
 - o 동·서독 방송통합협정 제36조에 의해 예전 동독방송 자산(아카이브 시설을 포함)의 귀속은 물론, 신 연방주간 방송협정에 의해 새로이 신설된 동독내의 4개방송국 MDR(Mitteldeutscher Rundfunk), NDR(Norddeutscher Rundfunk), ORB(Ostdeutscher Rundfunk Brandenburg), SFB(Sender Freies Berlin)의 방송자료를 보관토록 조치하였음.

- o 1992년 ARD는 예전 동독지역 방송자료실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베를린 아들러스호프(Adlershof, 동독중앙방송국 건물)에 구동독 방송자료 관리를 위한 보존소를 설립하였음. 하지만 방송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시설로 적합하지 않고 시설이 노후하여, 구 동독 지역인 포츠담에 방송기록보존소를 신축하여 2000년 12월에 이전 하였음.
- o (방통위) DRA에 보관하고 있는 구 동독 방송기록물의 양은 어느 정도 인가?
- o (피셔박사) 방송물 12만개, 라디오방송 5만여개, 2.5km의 문서, 사진 500만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학작품 영화, 아동프로, 동물영화, 범죄수사드라마는 온전히 보존관리가 되어있음. 다만 뉴스, 보도 탐사물 방송자료는 많은 자료가 유실되어 많이 남아있지 않음. 이와 같은 이유는 70년대 이후 방송녹화가 필름에서 VHS방식으로 바뀌면서 예산상의 이유로 자료를 덮어쓰는 재활용 방법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임.
- o (피셔박사) 덧붙여 구동독 방송프로그램은 현재 방영해도 뒤쳐지지 않을 정도의 훌륭한 품질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범죄수사물(Polizeiruf 110(경찰 전화 110) : 1971년부터 방영한 TV시리즈)과 아동프로(Unser Sandmännchen(우리의 샌드맨) : 1959년부터 방영된 어린이 TV프로그램)은 통일 이후에도 방영되고 있으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음.
- o (방통위) 서독에서 제작된 방송자료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가?
- o (피셔박사) 동·서독의 분단기 서독 미디어청은 권역별로 9개의 자체 아카이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독일 전역으로 송출하는 라디오 방송을 보관하는 아카이브도 있음.

<불임 - 면담 사진자료>



<면담 장면 >



<면담 장면 >



<기념 사진 >



<시설 견학 >



<전경 사진 >



<전경 사진 >

4. 독일 공영방송(RBB) 방문

□ 일시 / 장소 : '18.9.11.(화) 14:00~15:30/ RBB 회의실

□ 면담자 : 다트머스 쿰러 박사, 기획전략부 과장

□ 면담내용

- (RBB) 사장이 바빠서 본인이 대참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림.
- (방통위) 바쁜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림. RBB 현황 설명을 부탁드림
- (RBB) 독일의 방송은 공영방송 시스템으로 운영됨. RBB는 독일 연방주의 베를린주와 브란덴브루크주, 2개의 지역을 포함한 방송 사업. 원래 베를린과 브란덴브루크에 각각 방송사가 있었으나 통합되면서, 서베를린과 포츠담에 각각 사무실이 있음. 그리고 스튜디오 사무소는 포트구스, 프랑크프루트에 위치함. 공영방송은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금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되었음. 그래서 수신료로 운영되게 되어있음. 관련 법안들도 연방주에 있음. 그래서 정부 및 정당들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었음. 사회적 책임만이 유일하게 방송을 구속할 수 있음. 그러나 동독은 그렇지 않았으므로 통일 후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작업이었음.
- (방통위)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동·서독간 이질적인 요소들을 통합하는 것이 방송의 중요한 기능으로 생각함. 이러한 측면에서 RBB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였는지?

- (RBB) RBB가 처음부터 하나의 회사가 아니었음. 베를린주 방송과 브란덴브루크주 방송이 2003년 통합이 되어서 특이하게도 구 서독 지역과 구 동독지역을 아우르는 방송사가 되었음. 공영방송의 목적 중 하나가 주민간의 통합이었으므로 구성원들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음.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방송을 통해 보여주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특히, 뉴스에서는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였음. 이와 같이 사회여론을 방송에 반영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사항이었음.
- (방통위) 충분히 공감함. 구성원들의 통합을 위해서 동·서독간 방송의 내용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통일 이후 편성 정책을 잘 수립했어야 했었을텐데, 통일 후 서독의 방송방식으로 바로 변환하였는지? 아니면 별도의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 (RBB)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함. 당시 동독의 많은 방송제작 회사들이 신탁청의 사업성, 재무성 검토 단계에서 폐사되었음. 실제로 프로듀싱 할 수 있는 동독 회사들이 거의 없었음. 하지만 이 회사들이 폐사됨과 동시에 새로운 동독의 회사들이 설립되었음. 현재 RBB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상당수의 회사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진 회사들임. 당시 서독의 회사들이 동독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들이 있었음. 그러나 실제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동독인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서독의 사업가들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들었음. 이러한 사회 통합 과정에서 서독의 시스템을 인정하고 통일을 시작했던 것이 빨리 안정화를 이루는 첫 단추가 되지 않았나 생각됨. 서독의 인권보장, 공영언론의 역할 등은 동독에서 논의되어 추진하고자 했던 사안들임. 당시 선거 등을 통해 동독 주민들의 대다수가 서독 시스템을 받아들이고자 하였음.
- (방통위) 서독의 방송프로그램 종류, 시간 등 편성의 변화가 있었

는지? 아니면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추진했는지?

- (RBB) 이 역시 좋은 질문임. 큰 프로그램상의 변화가 있었음. 실제로 91년 말까지 기존체제로 동독에서 방송을 했으나, 그 이후 브란덴부르크 방송국과 중부독일방송(NDL)이 설립되는 등 신연방주의 방송을 대체할 방송사가 생기기도하고 기존 방송이 없어지는 등 방송 시장이 크게 개편되었음. 그러나 방송 시설이나 방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장단 및 경영진은 거의 서독인이었으므로 편성 등이 바뀌게 되어 결과적으로 방송 환경이 많이 바뀌었음. 베를린 지역에 94년 경 구 동독지역에서 소련군이 주둔중이었음. 이후 소련군이 철군하는 것이 동독주민들에게 관심사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심층보도 했었음. 이러한 주민들의 관심사를 방송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음.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혁명이었고 쉽지 않은 과정이었음.
- (방통위) 동서독의 방송기술과 설비의 격차가 있었을텐데, 동독의 방송국을 폐쇄한것과 시설을 고도화시킨 것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 (RBB) 본인이 정치학 전공자라 세세한 사항은 답변이 어려우나 전체적인 동·서독 방송의 내용의 차이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규격의 차이가 있었음. 서독은 PAL, 동독은 SECOM을 사용하였음. 당시 동독의 TV 관련 관련설비가 아주 낙후된 수준은 아니었음. 그러나 90년대 방송설비 전반적으로 요구 수준이 급격히 상승하여 방송 설비에 대한 재투자는 필요한 상황이었음. 동독지역에서 방송이 시작되는데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음. 예산이 있었음. 계신 이곳이 통일 직후 1992년 건설된 곳임. 그 전 동독에서 방송을 하던 곳은 폐쇄되었음

- (방통위) 그 과정에서 신규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동서독 간 기술 격차, 방송 시스템 통합, 방송장비의 고도화 등 재원이 많이 필요 했을텐데 순수히 수신료 인상을 통해 추진했는지? 연방정부 또는 주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했는지?
- (RBB) 기본적으로 수신료에서 재원을 충당하였음. 수신료 수준 및 분배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존재함. 통일 직후의 기간 동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용처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원회에 설명하고 그 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 그 기간내에 수신료를 높여서 징수 하였음. 그 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신설비, 방송을 통한 정치교육 등에 대한 재원은 연방정부측에서 재원을 지원 받았음. 일반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사항은 통일이 되면서 관련재원이 서독에서만 나온 것은 아님. 당시 동독 주민이 1,700만명 이었는데, 이들이 수신료를 부담한 재원들도 함께 쓰였음.
- (방통위) 동독지역에서 방송하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방송을 하는 것이라 서독의 민주주의 하에서 방송하는 것과 그 내용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함. 그런데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해 동독지역에 나가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내역이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함. 인권,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 등 민주주의 내용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통일 후 동독지역에서 편성이 어떻게 변경 되었는지?
- (RBB) 생각하신 것이 맞음. 인권, 자유민주주의 등은 공영방송으로서 중요한 테마가 될 수밖에 없었으나 쉽지 않았음. 이는 주로 시사, 토론 프로그램 등에서 다뤄졌는데, 기존의 권위주의 체제 아래서 살았던 동독의 주민들을 어떻게 민주주의자로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매우 고민을 많이 했고,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동·서독 주민들의 사회적 지표들을 보았을 때도 아직

완전히 하나로 통합의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여전히 지역간 빈부격차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민주주의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동·서독 간 차이가 있음. 심지어 베를린 내에서도 동부지역과 서부지역간의 차이가 존재함. 아직도 내적인 통합에 대해 난관이 있고 현재도 추진중임.

- (방통위) 그래서 이질적인 것의 통합 등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봄. 특히 그것들을 치유하기 위해 특별히 역점을 두는 방송의 가치 또는 정책이 있는지?
- (RBB) 말씀하신 내용은 독일에서도 큰 현안이었음. 지금도 통일 이후에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음. RBB내에서도 동·서독 출신 인들이 섞여 있음. 각 지역출신들이 모여서 시사프로그램 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토론을 하다보면 거기서도 차이가 느껴짐. 현 세대가 함께 살아감으로써 극복하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함.
- (방통위) 희망적으로 얘기하면 다음세대로 넘어가면서 충분히 극복 하리라 생각함.
- (RBB) 그런 희망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음. 현재, 구 동독지역에서 일어나는 통일의 후유증이 존재함. 그래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사회 통합을 고민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객관적인 보도가 필요함. 사회적 통합에 대해 국가에서 강제로 개입할 부분이 있고, 공영방송 등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전자는 실행하기 쉽고, 후자는 매우 어려움. 양자가 조화를 이루어야함. 독일 통일이 독일 사람이 해야 하는 상황 또는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이지, 독일의 사례가 꼭 모범적인 사례는 아니므로 이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함.

- (방통위) 방송사내의 동·서독 인적구성이 동독의 방송사가 생길 때 서독의 인력이 참여한 비율과 30여년이 지난 지금의 인적 구성의 비율차이가 있는지? 그런 인적구성이 공영방송의 편성과 제작에 영향을 미쳤는지?
- (RBB)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기 어려움. 두 시점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통일 직후 구 동독의 방송사는 거의 해체되었기 때문에 구 동독 방송인들은 새로운 회사에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당시 중요한 절차는 그 사람이 슈타지(독일국가안전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 했으므로 100% 구 동독출신의 방송인을 채용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 당시 포츠담 지역 대부분은 동독 출신이었고 서독인들이 약간 합류하는 수준이었음. 당시에는 정책적으로 동·서독 출신들이 섞여서 방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장려하였음. 그런데 현재는 30년이 지난 시점이라 어느 지역 사람인지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추측하건데 50:50 정도가 아닐까 생각함.
- (방통위)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 내주시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림. 한국의 남북간 평화 통일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
- (RBB) 중요하고 복잡한 주제인데 어떤 점이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함.
- (방통위) 본인이 몸담고 있는 기관은 대한민국의 방송 전체를 규제하는 규제기관임. 현재 우리도 남북간 대화를 하고 있는 국면에서 사회통합 부분, 특히 북측은 우리와 달리 사회주의 체제라 많이 다름. 그래서 추후 남북이 평화 체제가 되었을 때 독일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봄. 우리 방통위는 방송 내용에 관여하지 않지만 크게 자유민주주의, 사회통합 등 큰 틀에서 정책을 세우는 부분이 있으므로, 월 박사님의 말씀이 크게 도움이 되었음.

<불임 - 면담 사진자료>



< 면담 장면 >



< 면담 장면 >



< 면담 장면 >



< 기념 사진 >



< 기념 장면 >



< 전경 사진 >

5. EU 지역개발국 방문

□ 일시 / 장소 : '16.6.3.(금) 12:00~14:00 / EU 지역개발국 회의실

□ 면 담 자 : 에릭 운테르워자커 지역개발국장

□ 면담내용

【 EU 구조 기금 개요 】

- o (EU) EU 구조 기금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 아시다시피 EU는 6개 국가에서 출범해 현재 28개 회원국이 있음. 새로운 회원국이 가입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도구, 즉 기금의 필요성을 깨닫게 됨.
 - 로마조약(Treaty of Rome)에 경제적, 사회적 결속(cohesion)을 위한 기금 마련에 관한 조항이 있어, 이러한 활동의 법적 근거가 있음.
 - 예산 투자 분야의 경향은 과거에는 철도, 공항, 환경 시설 등 기본 인프라에 투자했다면, 최근 몇 년 전부터 연구, 혁신, 중소기업 지원 등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음. 또한 EU가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국으로서 이산화탄소 절감 활동, 에너지 효율성 연구, 재생에너지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o (EU) EU 예산은 7년 주기(cycle)로 운영됨. 현재 2014 - 2020 주기 중이며, 다음 2021-2027년 예산을 기획하고 있음.
 - 예산 규모 및 집행분야: 연 1000억 유로 규모로 크게 농업(40%) 및 지역개발, 그리고 사회 결속 정책 (33%)로 나뉨

- 재원: EU 회원국은 순 기여국(net payers)과 순 수혜국(net receiver)로 나뉨*
- 기여국: 독일(가장 큰 기여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 수혜국: 크로아티아, 폴란드(가장 큰 수혜국) 등 주로 최근 (2004, 2007, 2013년)에 가입한 국가

* 기여도는 회원국 경제력(GDP)에서 계산하고, 모두가 기여하고 모두가 수령하기 때문에 “순” (net) 개념으로 기여국과 수원국으로 부름. (즉 기여금액이 수령금액보다 더 높으면 “순기여국.”)

- 지역개발국은 연 350억 유로의 예산을 책임지고 700여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음. 회원국과 협업하여 공동집행(shared implementation)을 하고 있음.
- 예산의 할당 방법은 각 회원국의 관련 당국(정부부처, 지방정부,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집행 분야를 결정함(경제 지표를 참고함).
- 예를 들어 가장 큰 수혜국인 폴란드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4-2020 주기에 800억 유로(~연 110억)를 수령함. 철도, 인프라, 도로, 연구 등 전략적 분야를 회원국과 협의하여 집행함. 가장 큰 기여국인 독일도 연 28억 유로를 지원받음. 모두가 내고 모두가 받는 방식임.
- 금융 프로젝트(Financing)로 EU는 회원국 당국과 협조융자(co-financing)도 이행하고 있음. 부유국의 경우 EU가 부담하는 비중이 적고(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의 경우 EU 부담비율은 25%, 나머지 75%는 오스트리아 정부나 민간부문이 충당함)
- 지원금 종류는 무상지원과 은행을 통한 융자로 나뉨
- 지원 금지분야: 마약(담배 포함), 핵 시설 및 핵 폐기 관련 사업, 탄소 배출권 거래, 군사 관련 사업 등

- o (방통위) 기금 집행 분야를 농업(40%)과 결속 분야(30%)로 말씀 하셨는데, 나머지 분야는 어디로 집행되는가?
- o (EU) 연구와 혁신을 위한 특별 기금, 대외 지원(제3세계), 환경 문제, 그리고 행정 비용(임금, 시설) 등이 있음. 또한 다음 예산 주기에는 청년과 학생들이 타 EU회원국으로 유학 가는 것을 장려하는 기금에 더 많이 할당할 계획임.

【 통일 독일과 구조기금 】

- o (방통위) 지금은 독일이 경제력이 강해서 EU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독일은 통일 과정을 거쳐서 재정부담이 있었을 것임. 그 때 통일과 관련 인프라 확충, 산업구조 개편 문제, 고용 촉진 등 분야에 독일이 주력했는데, 그때 이 기금이 지원했는가?
- o (EU) 구 동독 지역은 통일이 되면서 EU에 자동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 가입 절차에 비해 더 빠르고 수월했음. 통독 관련으로는 완전한 통일을 결심한 후, 동독 지역의 경쟁력 부족과 동독에서 서독으로 두뇌 유출(brain drain) 현상이 우려되었음. 동독 지역에서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음. 지난 25년 동안 서독에서 동독으로 1.3조 유로가 지원됐고, 연금, 환경, 의료보건 등 사회 분야에 많이 집행되었음. 따라서 어느 정도 경제적 통일은 완료됐다고 볼 수 있음.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지원금(transfer payments)은 곧 만료될 것이기 때문임. 그러나 정치적 통일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 선거 때 서독과 동독 주민들간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통일이 되면서 동독이 자동으로 EU 구조 기금 대상이 되었음. 90년대 초부터 구 동독 지역으로의 EU 구조 기금 지원이 있었고 규모는 540억 유로였음.

- (방통위) 이 EU 구조기금에서 독일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독일이 기금의 혜택을 보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 (EU) 정확한 수치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동독으로 지원되는 지원금 대부분은 독일 내에서(서독에서) 이루어졌음. 10, 15년 전에 EU 구조기금은 인프라에 투자됐다면, 요즘에는 혁신과 연구, 도시 개발, 도시 내 중소기업 지원, 도시 활성화, 구 산업단지 지역 재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리고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도 투자하고 있음.

【 EU 기금의 성과 】

- (방통위) 기금은 EU 국가가 서로 상생하기 위해 효율적 방안이라고 생각함.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성과가 큰 분야가 있다면, 3가지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음.
- (EU) 독일의 사례에서 통독 당시 구 동독 지역의 산업 기반은 사실상 사라졌음. 그러나 EU 구조기금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낙후된 산업 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들 수 있었음.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산업은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게 됨.
- 그러나 통독의 부작용도 있었음. 통일 후 10여 년 동안 동독 연방주 주지사는 서독 출신이었고, 이에 동독주민들은 서독으로부터 점령 당했다고 생각하고 이등국민 취급받았다고 생각함. 또한 구 동독 정부 자산은 모두 주정부로 위탁되었고, 서독 투자자에게 팔렸음.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됨.
- (EU) 구조기금의 혜택 분야로는 회원국이 처음 가입했을 때 구조 기금은 인프라에 많이 투자됨. 가입 시 준수해야하는 정책 분야가 20개 있는데, 일부 정책 분야는 많은 투자를 요구함. 예를 들어 환경

문제에는 깨끗한 물, 하수구처리, 대중교통 관련 조건 등이 있음.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 준수하기 위해 EU기금을 집행하기로 합의함. 따라서 많은 구 소련 나라들은 회원국 초기에 EU 정책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인프라에 투자했고, 또한 이러한 인프라를 개선하여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 분야는 기업, 생산적인 분야, 산학(產學) 연구개발 등 투자분야가 바뀌고 있음

【 구조기금 운영 및 어려움 】

- (방통위) 구조기금 마련과 할당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 (EU) 기금 할당 계획은 회원국 정상과 재무부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시작됨. 그리고 예산을 확정한 이후 능숙한(competent) 당국이나 주체와 세부적인 회의를 통해 정함. 그러나 회원국이 처음 가입했을 때는 이러한 능숙하고 적합한 주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두 분야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첫 번째는 공공조달 분야임.(입찰 과정에서 사기나 부정행위의 위험) 두 번째는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였음. 가입 초기에 많은 회원국에서는 예산관련 전문성(사전 조사부터 운용, 관리 및 감시 등 능력)이 부족하였음.

【 EU 기금 할당 방법 】

- (EU) 우선 고위급 회의를 통해 협상을 함. 그리고 할당 비중이나 금액은 GDP와 노동시장(실업률 등) 주요지표 등 두개에 근거하여 결정함. 다음 예산 주기에는 논란이 되는 '이민 지표'(국가 간 이민으로 발생하는 부담)를 도입할 것임. 2020년부터 지표비중은 경제력(GDP) 81%, 노동시장 15%, 이민은 3%를 차지할 것임.

- EU에서 회원국으로 기금제공 시 엄격한 이행 조건이 있음. 7년 동안 매년 예산이 집행되지만, 기간 내 이 예산을 쓰지 않으면 (청구서 같은 자료가 없으면) 관련 기금 수령자격이 박탈됨.

【 EU 기금의 농업지원 】

- o (방통위) 농업에 지원하는 비중이 40%인데, 어떤 분야에 가장 크게 지원하는가?
- o (EU)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농사와 농민지원(farming)임.
 - 매년 농업 종사자들에게 소득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30년 전 이러한 지원금은 생산성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소득 보조금이고, 따라서 농업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두 번째는 지역/지방 개발 (rural development)임. 회원국은 집행 목록에서 각자 여건에 맞는 집행 분야를 선택함. 예를 들어 2004년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농업부문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은 농장과 생산성 시스템에 투자하는 등 경쟁력 향상에 집중했음. 반면 영국과 같은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일하고 도시근교나 시골에 살기 때문에 환경에 더 많이 투자함. 영국의 경우 지방개발 기금 80%는 시골 조경 등에 쓰임.
 - 세 번째는 마을 활성화(village)임. 문화시설, 사회복지 서비스, 학교, 인터넷 인프라 등에 투자하여 시골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임.

【 4차 산업혁명 대응 】

- o (방통위)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EU 기금에서 기술 투자에 어느 정도 역점을 두는지?

- o (EU) 혁신이 주요 기금 투자분야 중 하나임. 첨단기술 및 산업에 투자하는 주요 분야로 두가지가 있음.
 - 연구 및 혁신에 관한 “Horizon 2020”으로 이 기금은 유럽집행위가 직접 운용함. EU가 정한 첨단기술 프로젝트에 기업들이 경쟁 입찰 하는 방식임.
 - 기업 상대로 “기술 및 혁신에 관한 구조기금”으로 구조기금의 경우 회원국이 더 많은 책임을 갖게 됨. 돈이 할당되기 전에 정부, 학계, 산업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주요 혁신 및 투자분야를 파악하고 전략을 세움.

【 EU 기금 자금의 성격 】

- o (대사관) 기금 자금의 성격이 궁금함. 도로에 투자하는 데 용자인지 투자금인지, 즉 EU가 그냥 돈을 주고 지분을 갖는지?
- o (EU) 대부분의 경우 EU는 지분을 갖지 않음. 도로나 철도의 경우 대부분 도로건설 업체에 보조금(grant)을 제공함. 주요 교통 links의 경우 회원국 정상들이 서명한 협정에 의해 교통 link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게 기금을 제공하고 실적(performance)을 관리함.
 - 예를 들어 Bratislava 지역의 ring road의 경우 10%는 EU 지원금이고, 나머지는 민간과 유럽투자은행이 협조융자(co-financing)로 구성됨. 반면 루마니아의 경우 모든 도로투자는 지원금임.
 - 생산성 관련 부문에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환경, 학교, 보건 등 분야에는 지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함.

<불임 - 행사 참석 사진자료>



< 환담 장면 >



< 면담 장면 >



< 기념 사진 >



< 기념 사진 >



< 기념 사진 >



< 기념 사진 >